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행사명 : 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18. 10. 4(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대한민국 국회 정론관

공동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국가손배대응모임

발언자 :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박래군 인권재단 사  
람 소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안순호 4.16연대 대표

## 식순

- 여는 말 및 소개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 : 1.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2.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3.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4.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예)  
5. 안순호 4.16연대 대표(예)
- 법안 소개 : 박주민 국회의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진상조사결과,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경찰이 집회·시위 및 노동쟁의를 하는 국민을 상대로 불법폭력 진압을 해온 것이 드러났다. 특히 백남기 어르신 사망을 불러온 민중총궐기에 대한 불법진압과 쌍용차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불법진압은 청와대가 개입한 국가폭력이었음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진상조사위는 이와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를 권고하고, 가해자인 경찰이 피해자인 국민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차 사태에 관하여 소 취하를 권고했다. 그런데 어쩐가. 경찰은 진상조사위의 소 취하 권고에도 불구하고 배임을 운운하며 피해자인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추모집회 및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집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경찰개혁위원회가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고, 경찰 역시 권고 내용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경찰은 약속을 뒤집고 조정에도 사실상 응하지 않았다. 지난 정권 동안 사법절차를 이용해 국가폭력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 준 경찰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국가송무의 지휘 책임자인 법무부장관과 이번 소송을 지휘하는 서울고검의 안일한 태도 역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기본권수호의 보루라 자처하면서도, 소송절차를 기본권 행사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악용하는 국가와 기업의 태도에 눈감아온 사법부 역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는 국가가, 기본권 주체인 국민을 상대로 기본권행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권 행사에 대한 괴

롭힘소송절차를 조기에 종결하고, 국가와 기업이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동결함으로써 기본권을 행사한 국민과 노동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민사 소송과 집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어,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이 소송절차를 악용해 국민의 기본권행사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 주체인 국민이 언론과 출판, 집회와 결사, 노동쟁의를 통하여 공적인 중요 사안에 대해, 보복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의 신속하고 진지한 법안 논의를 촉구한다.

2018. 10. 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국가손배대응모임(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강정마을회, 강정법률지원모금 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생명평화결사, 손잡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충남건설기계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 영동·아산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충남지역본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